

# 2015년 관세청 업무보고

2015. 1. 6



관세청  
KOREA CUSTOMS SERVICE

# 순서

I. 기관 현황 .....	1
II. 2014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.....	4
III. 2015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	9
IV.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.....	12
1.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/	13
2. 한·중 FTA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/	14
3.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뒷받침 /	15
4. 불법 무역·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/	16
5. 유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수호 /	17
6.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/	18
7. 관세행정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 /	19



# I. 기 관 현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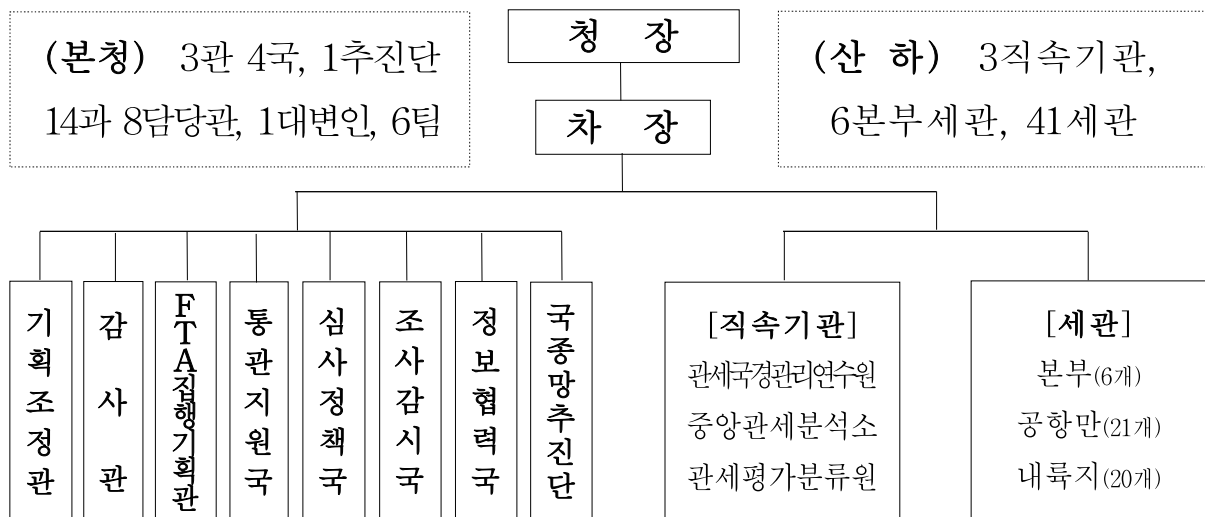
**1 개 청** : 1970. 8월,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

## 2 주 요 기 능

-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① 국가재정수입 확보 | ② 국제무역 및 수출입물류 촉진 |
| ③ 대외경제질서 확립 | ④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 |

- ☐ (통관지원국) 수출입화물·여행자 통관, 보세제도 등 물류 촉진
- ☐ (심사정책국) 관세·부가세 등 징수, 관세조사, 과세 인프라 확충
- ☐ (조사감시국) 불법 무역·외환거래 단속, 감시·조사 장비 운영
- ☐ (정보협력국) 관세행정 정보시스템 개발·운영, 국제 세관협력
- ☐ (FTA집행기획관) FTA 활용을 제고 등 이행 지원, 원산지 검증

## 3 조 직



본부세관(6)	서울 · 인천공항 · 부산 · 인천 · 대구 · 광주
공항만 세관(21)	평택 · 속초 · 청주 · 김포 · 인천공항국제우편 · 김해 · 거제 · 마산 · 포항 · 울산 · 광양 · 목포 · 여수 · 군산 · 제주 · 동해 · 대산 · 고성 · 사천 · 부산국제우편 · 통영
내륙지 세관(20)	안양 · 대전 · 천안 · 용당 · 양산 · 창원 · 수원 · 안산 · 구미 · 구로 · 성남 · 의정부 · 충주 · 파주 · 원주 · 사상 · 진주 · 부평 · 익산 · 전주

## 4 정 원

(’14.12월말 기준)

구 분	계	본 청	본부세관	세 관	직속기관
계	4,594	357	2,731	1,362	144
5급 이상	366	118	133	96	19
6급 이하	4,228	239	2,598	1,266	125

\* (성비) 남성 66.6%, 여성 33.4%

## 5 2015년 세출예산 : 4,814억원\*

인 건 비	기본경비	사업비
2,756억원 (57.2%)	287억원 (6.0%)	1,771억 (36.8%)

\* ’14 세출예산 4,826억원 대비 0.2% 감소

## 6 2015년 징세목표[잠정] : 64.3조원\* (總 국세 221.1조원 중 29.1%)

관 세	수입부가세	기타 내국세**
9.9조원 (15.4%)	48.4조원 (75.2%)	6.0조원 (9.4%)

\* ’14년 예산(68.1조원) 대비 5.7% 감소한 수준

\*\*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



## Ⅱ. 2014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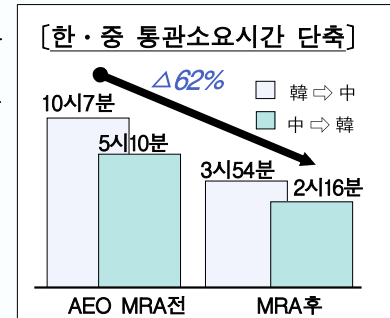
# 1 2014년 주요 정책성과

## 1 무역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 조성

- 양국 정상 임석하에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「한·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\*」을 체결\*\*('14.7월) 하여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

\* [5大협력] AEO MRA, 원산지, 무역통계, 불법단속, 인적교류

\*\* 한·중 공동성명 부속서에 정상회담의 중요 성과로 채택



- 「YES-FTA센터」 신설 등 FTA활용 촉진 정책\*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원자재의 원활한 국내조달 지원

\* 수출기업의 FTA 활용율('14년말) ⇒ 한·미 76.1%, 한·EU 85.4%, 한·칠레 80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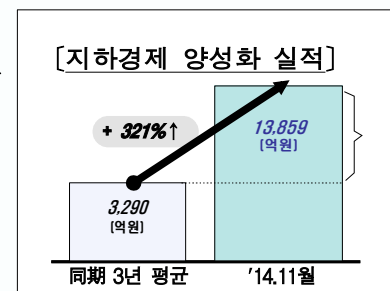
- 수출입통관 과정의 인허가 및 절차상 규제(36개 법령 5,500여개)를 합리적으로 재정비\*하는 등 기업에게 편리한 무역환경 구축

\* AEO 등 차등적용 세관장확인 생략건수(감축비율) : 3,630건(5.2%)

## 2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가재정 뒷받침

- 환율하락, 수입둔화 등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세수 확보\*에 조직역량 집중

\* 65.5조원(전체 국세목표 201.9조원 중 32.4%) 재정조달



- 관세행정 기능·인력 재배치\* 등 과세 인프라 확충 및 탈세 차단에 주력하여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\*\*

\* 농산물심사 전담팀 신설(2.24), 이전자격 전담팀 확대(3.17), 공인회계사 특별채용(10.15)

\*\* 공약가계부 기준(순증) 총 1.1조원을 확보하여, 목표(1.1조원) 달성 완수

- 수출입 실거래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로 공공재원(국고·국책은행)을 빼돌리는 비정상적 관행 집중 단속\* 및 손실자금 회수 추진

\* 7천억원대 국책은행 손실을 입힌 벤처기업(M社) 위장수출(3조원 상당) 검거('14.10)

### ③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

- 중소기업 대상으로 성실무역업체(AEO) 지정\* 및 면세점 사업 진출을 확대\*\*

\* [중소 성실무역업체(AEO)] ('13) 14개 ⇨ ('14) 35개

\*\* [출국장 중소중견 면세점] ('13) 1개 ⇨ ('14) 6개

- 중소기업의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, 납기연장·분납 등 세정 지원 강화

[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]

지원내용	지원실적
납기연장·분할납부	124업체, 271억원
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등 환급지원	3,839업체, 2,784억원
신용정보제공 유예	171명, 257억원
채납자 통관 허용	1,293명, 491억원

-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Job-Matching 으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, 영세 중소기업에 맞춤형 FTA 컨설팅 서비스\* 제공

\* 중소기업의 FTA 활용단계에 따라 스스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원

### ④ 소비자권의 보호 및 민생 안정

- 병행수입물품 세관인증 문턱을 낮추고 수입가격 공개품목을 생활 소비재\* 위주로 개선하는 등 수입물품의 가격경쟁 촉진\*\*

\* 1차 공개(4.8) : 생수, 치즈, 와인등 10개 // 2차 공개(12.5) : 핸드백, 지갑, 손목시계 등 15개

\*\* 유통·판매가격이 가격공개 전에 비해 1.6%인하(한국물가협회, '14.9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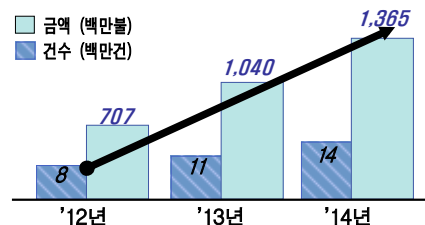
- 원산지둔갑 우려물품의 유통이력관리\*를 강화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유통질서 확립

\* 신규 : 김치·냉동콩치(3.1), 식염(11.3), 재지정 : 가리비·돔(8.23), 제외 : 썸그리스, 안경테(3.1)

### ⑤ 해외직구 등에 대한 통관체제 혁신

-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하여 전담조직 신설, 첨단검사 장비 확충, 전용물류센터 설치 등 신속·안전한 통관체제 구축

[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추이]



- ‘내국세 환급(Tax Refund) 절차’ 개선\*, 해외여행자용 모바일 웹 ‘Tour-PASS\*\*’ 보급 등으로 해외 여행자의 편의 증진

\* 1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건에 대해 세관방문 없이 공항에서 즉시 환급 받도록 세관절차 생략

\*\* 외교부·법무부·검역기관·세관 등 해외여행 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 // 이용인원 1백만명 돌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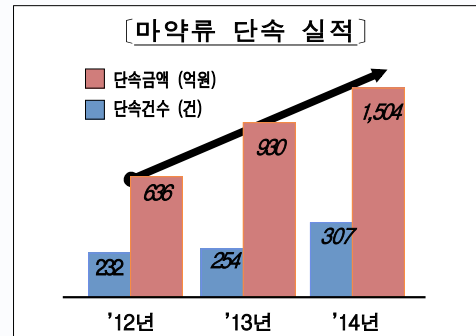
## 6 국민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

-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공산품·고철 등 국민건강 직결 수입물품(123개 품목)에 대해 세관검사\* 등 통관관리 강화

\* 수입식품 검사율 단계별 확대 : 12.7%('14.1~6월) ⇨ 16.2%('14.1~12월)

- ‘마약류 우범화물 선별시스템’ 구축 및 X-Ray 검색기 등 첨단장비 확충을 통해 총기·마약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방지\*

\* 최근 10년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‘필로폰’ 단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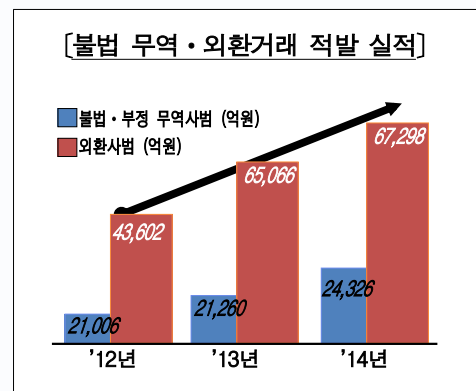
## 7 불법·부정무역 및 국부유출 차단

- 밀수·원산지둔갑·위조상품 등 대외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 불법·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을 엄단\*

\* 불법부정무역 단속(억원) : ('13) 21,260 ⇨ ('14) 24,326

-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국외 재산도피·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\* 척결

\* 조세회피처 관련 불법외환거래 단속(억원) : ('13) 12,732 ⇨ ('14) 40,328 (전년대비 217%↑)



## 8 국익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

-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무역·통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 수출 확대 노력 경주\*

\* '14년 우즈베키스탄 수출 // '15년 카메룬, 콜롬비아, 르완다 수출 가시화

- 관세관·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중국·인도네시아 등 해외진출 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결\*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

\* 통관애로 332건 접수, 308건 해소 ⇨ 기업비용 400억원 절감

- WTO 무역협정에 위험관리, 통관시간 측정, 통관단일창구 등 우리 관세제도\*를 반영함으로써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선도

\* 협정(발효예정 15.7) 반영 : 위험관리·통관소요시간(\$7) 및 싱글윈도우(\$10)

## 9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정부3.0 선도

- 국세청과 과세 기초정보 공유(36종) 및 체납 공동정리\*, 행자부·국토부 등과 과세정보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효과적 탈세 차단 기반 마련

\* 정보공유로 945억원 추정, 1,067억원 체납정리

- 통관단계에서 불량 생활용품 반입을 차단\*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검사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\*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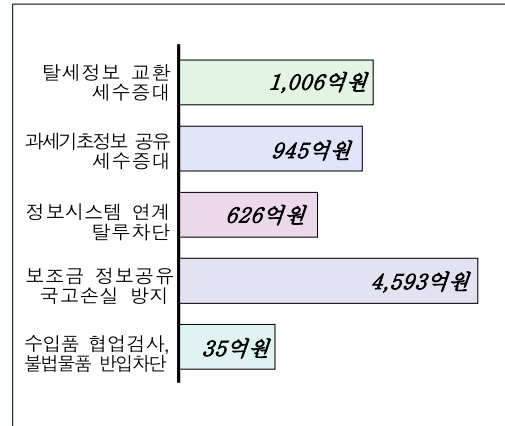
\* 납 기준치 초과(유아용 의류) 등 18만개(컨테이너 30대 분량) 적발

\*\* (기대효과) 5년간 사회적 손실비용 약 2.9조원 절감 예상(정부 연구용역, '14.11월)

-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협업체(농림부·해수부·지자체 등 17개 기관) 구축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원산지표시 정상화 추진\*

\* 원산지위반 단속(억원) : ('13) 3,828억원 ⇨ ('14) 8,665억원 (전년대비 126%↑)

[정부3.0을 통한 관세행정 성과]



## 2 평 가

- ◆ 관세행정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·중소기업 지원 등 국정 과제 및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

- 세계은행(World Bank) 통관환경 평가 6년 연속 세계 1위('14.10월)
- 국제공항협회(ACI) 국제공항 세관 만족도 평가 9년 연속 세계 1위('14.2월)
- 정부3.0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2회 수상('14.7월, 12월)
-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('14.2월)
- UNI-PASS, 전자정부 세계화 유공 대통령상('14.10월)

- ◆ 박근혜정부 3年次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,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정부 핵심정책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,

-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필요



### **Ⅲ. 2015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**

- 1. 정책추진 여건**
- 2. 정책추진 방향**

## ① (대외경제 전망)

-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\*에도 불구하고 일본·유로존의 미약한 회복세, 중국경제 둔화 우려, 국제유가 하락 등 불확실성 상존

\* 세계 GDP 성장률 전망(IMF) : ('14) 3.3% ⇨ ('15) 3.8%

- FTA를 통한 경제블록 가속화, 중국의 기술추격, 선진국의 제조업 혁신\* 등으로 무역환경 급변 및 글로벌 경쟁 심화

\* 엔저에 기반한 일본 제조업 재무장, 선진국의 IT 결합형 스마트 제조업 시스템 등

## ② (국내경제 예측)

- 환율상승, 경기부양정책 효과 등 경기회복의 긍정적 요인과 소비·투자 부진, 가계부채 증가 등 부정적 요인 혼재\*

\*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(기획재정부) : ('14) 3.4% ⇨ ('15) 3.8%

- 세계경제와 교역 회복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가 예측되나 내수 개선으로 경상수지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\*

\* 국제수지 전망(기획재정부) : 수출 3.7%↑, 수입 3.2%↑, 경상수지 820억불 흑자

## ③ (관세행정 환경)

- 해외직구 등으로 행정 수요자가 기업 외에 개인으로 확대되고 특송화물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출입 통관환경 급변\*

\* 해외직구: ('08) 2백만건 ⇨ ('14) 16백만건(8배) // 특송: ('08) 8백만건 ⇨ ('14) 22백만건(3배)

- 한·중 FTA 체결을 앞두고 저가 불량물품 반입, 원산지 둔갑 등 각종 불법물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

- FTA를 통해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보다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

## 추진 방향

박근혜정부 3年次를 맞아 경제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창출에  
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견인

-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FTA 활용을 제고 등 기업지원을 강화
-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대응한 철저한 세수관리 및 과세 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
- 불법·부정한 무역 및 외환거래 근절 등 엄정한 대외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보호

## 중점 추진과제

-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
- 한·중 FTA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
-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뒷받침
- 불법 무역·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
- 유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수호
-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
- 관세행정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



## **IV.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**

- 1.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**
- 2. 한·중 FTA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**
- 3.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뒷받침**
- 4. 불법 무역·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**
- 5. 유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수호**
- 6.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**
- 7. 관세행정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**

## □ 쏘방위 수출 지원을 통한 역동적 대외경제 구현

- 전국 주요세관에 「수출입기업지원센터」를 신설하여 FTA 활용부터 통관·물류·납세 지원까지 관세행정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
- 수출규모가 크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 및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여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 해소
- 온라인쇼핑 수출(逆직구)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\* 및 해상배송체계 구축 등 해외 逆직구 확대 기반 조성

\* B2C몰의 해외주문·판매정보를 관세청 UNI-PASS와 연계하여 편리한 수출신고 가능

## □ 면세점의 경쟁력 제고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

- 요우커 등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는 서울·제주지역에 대형 시내면세점을 신설하여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\*

\* 신규투자 3천억원 및 고용창출 4천6백명, 年 2천억원의 외화획득 효과

- 특허가 만료되는 기존 면세점(서울 4, 인천공항 4, 제주·부산 각 1)의 원활한 후속사업자 선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
- 면세물품의 해외공급 절차 마련\*, 관세관을 통한 현지정보 제공과 세관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내 면세점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

\* 국내 통합물류창고에서 해외에 설치되는 우리나라 면세점에 판매물품을 직접 공급

## □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

-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FTA 전문교육 및 고용매칭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AEO 공인비용을 지원\*하여 수출확대 촉진

\* '15년 46개 중소수출기업 대상으로 7억 4천만원 지원, '16년까지 150개이상 기업 공인

-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성실 중소기업에게 납기연장·분할납부 등의 세정 지원을 통해 경영의 조기 정상화 지원

### □ 한·중 FTA의 100% 활용 환경 조성

- 전국세관에 「YES-FTA China Center」를 설치·운영\*하여 1:1 컨설팅 등 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
\* 6대 본부세관 및 24개 일선세관 등 총 30개 세관 83명 배치
- 중국내 주요 거점지역\*에 「FTA China 협력관」을 파견하여 현지 통관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
\* 광둥(광주), 산둥(청도) 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지역
- 원산지정보 전자교환, China-C/O 전담데스크, 전용 원산지 관리 시스템(FTA-PASS) 보급 등 원산지증명 부담완화로 FTA 활용 제고

### □ China Risk 최소화를 통한 국민불안 해소

-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發 불량 먹거리·의약품, 마약류, 지적권 위반물품 등 高위험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체계 재정비
- 통관·유통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의 국산둔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 개편 및 위반 단속 강화
- 對중 무역기반 금융범죄의 모니터링 강화, 자본거래와 연계한 가격심사 및 첨단 분석기법 운용 등을 통해 지능형 탈세 방지

### □ 新 교역시장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인프라 정비

- 對중 교역의 주요 통로인 서해안권 세관\*의 조직·인력·업무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FTA 활용형 현장지원 기반 구축  
\* 인천공항·김포·인천·평택 세관이 對중 수입의 83.3% 차지 (건수기준)
- 개성공단제품의 국산 인정, 對중 임가공무역, 북한을 경유한 對중 교역 등에 대비하여 관세행정 제도 및 시스템 재정비



### □ 2015년 세수목표 달성

- '15년 세수목표 64.3조원\*(잠정)을 차질없이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

\* 전체 국세 221.1조원의 29.1% 수준(수입액 5,728억불, 환율 1,030원/\$ 기준)

- 세수변동 요인 분석 및 진도율 상시 점검을 위해 「세수분석 전담팀」을 신설하고 상황별 전략적 세수확보 방안 수립·시행

### □ 조세탈루 고위험 분야에 대응 강화

-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·품목\*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강화 및 공동 체납정리 전국 확대

\* 고세율 농수산물, 과다환급 업종, 품목분류 허위신고, 다국적 기업 등

- 쌀관세화\*에 따른 저가신고에 대비하여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쌀을 통관前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탈세심사 강화

- 명의대여·차용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자료 미제출시 국내판매 가격에 기초한 과세방법 도입 등으로 비정상적 납세환경 정상화

### □ 과세품질 및 불복대응 역량 제고

- 과세前 3단계 절차\*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량과세를 제거하고 고액(10억원 이상) 추징건은 본청 심의회 사전검토를 제도화

\* (1단계) 심사처분심의회 → (2단계) 본청 HS·관세평가심의회 → (3단계) 과세전적부심

- 다국적기업의 불복증가에 대비해 본청에 「특별 쟁송팀」을 신설하고 전국 6개 본부세관에 「다국적기업 불복 대응팀」 운영

- 국내외 법령정보·과세정보·재결사례 등을 탑재한 통합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과세품질 제고 및 불복대응 기반 조성

#### □ 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원 부담편취 차단

- 정상적인 무역·외환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·자금세탁 등을 엄단하기 위해 「국부유출 수사 전담팀」 구성·운영
- 수출입가격을 조작하여 건강보험급여\*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조사 강화
  - \* 수출입가격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내역 입수 근거마련(관세법개정, '15.1.1시행)
- 국세청 등 유관부처간 정보공유, 외국세관과 수사공조, 해외거주 교민 제보 등 해외진출기업의 불법외환정보 입수채널 다각화

#### □ 밀수 등 국민생활 밀착형 불법행위 엄단

- 상용물품 분산반입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지 정보분석 및 인터넷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실시
-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밀수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산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선적·수출까지 쏙 과정의 관리 강화
- 검사대상 선별 고도화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특송·우편 화물로 소량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

#### □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행위 척결

-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시 세액을 경감하고 미신고시 가산세를 중과\*하여 자진신고 문화 정착
  - \* (자진신고) 세액의 30% 경감, (미신고) 가산세 상향(30% → 40% 또는 60%)
- 특송화물로 반입된 상용물품의 부당 면세통관 및 특송업체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제재 신설
- 바뀌치기 등 불법수출 차단을 위해 적재지 검사체계를 정착하고 중고차 등 우범 수출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토록 개선

## □ 불량·위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

- 원안위·해수부·행자부 등 방사능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에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세관 역할 강화
- 국내외 기관간 정보교류 강화로 마약류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글로벌 합동단속\*을 주도하여 신종 마약류의 쏠세게 확산 방지
  - \* WCO와 합동으로 전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종마약 집중단속 및 정보교환(작전명:CATalyst)
- 자동차 부품·소방기기·의료용구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재권 위반물품을 선정하여 기획 단속

## □ 관세국경 감시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

-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\*, 세계 물 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 개최를 위해 종합 안전관리 대책 수립·시행
  - \* 대회개요 : (기간)'15.7.3~'15.7.14, (참가국) 170여개국, (선수·임원)약 20,000명
- 안보 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위해 첨단 감시장비 도입 및 X-Ray 판독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공항만 감시역량 강화

## □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3.0 협업체계 구축

- 환경부·고용부와 정보공유 및 합동검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·석면 등 위해물품을 관세국경단계에서 차단
-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內 식품검사 및 위해정보를 수입검사에 활용하여 불법 먹거리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
- 농관원·수품원·지자체 등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기관간 권역별 협업을 통해 범정부 단속체계 강화

## □ UNI-PASS(관세행정시스템) 수출 확대

- 대륙별 거점국가(에콰도르·탄자니아 등)를 중심으로 콜롬비아·카메룬 등 주변국으로 UNI-PASS 수출 확산 추진
- 개도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(BPR)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수출 대상국 지속 발굴
- 효율적인 UNI-PASS 수출을 위해 WB(세계은행), IDB(미주개발은행) 등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\*

\* WB와 자금지원 협의, IDB 연차총회 및 비즈니스 포럼 대표단 파견 등

## □ 국익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추진

- 교역규모, AEO MRA 체결여부, 통관애로 발생빈도 등을 고려한 전략적 관세청장회의 개최\*로 우리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

\* (교역규모) 중국, 일본, (AEO MRA 미체결) 인도, 페루, (통관애로 빈번국) 필리핀, 카자흐스탄 등

- 국제원산지 콘퍼런스·WCO IT 콘퍼런스 등 국제회의 개최 및 적극 지원을 통해 한국형 관세행정 제도의 국제표준화 추진

## □ 글로벌 관세인재 양성 및 국제무대 진출 지원

- 국제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WCO 인증교관·국제훈련교관 등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
- 위험관리·원산지 등 분야별 업무전문가들이 WCO 주요 회의체 및 국제회의 의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
- 한국 관세행정의 대외영향력 확산 및 국익제고를 위해 WCO 국장급 진출\* 등 국제기구에 인적 기여 확대

\* '15.6월 WCO 총회시 3개 국장(관세무역국장, 조사통관국장, 능력배양국장) 선출예정

## 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관세행정 개혁

-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및 규제지도(Regulatory Map)\* 작성 등을 통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관세행정 규제개혁 추진 프로세스 마련
  - \* 중요도, 순응도를 기준으로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
-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제거를 위한 「2015 관세행정 정상화 계획」을 수립·시행하여 관세행정 내외부의 적폐(積弊)를 일소
- 정책의 결정·집행시 국민의견 수렴을 필수화하고 타부처·민간과 협업 성공사례 확대 등 정부3.0 내재화로 ‘열린 관세청’ 구현

## □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新 조직문화 조성

- ‘4P\* Up 캠페인’을 전개하여 불필요한 일 버리기, 원활한 의사소통, 창의적 업무수행 등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현
  - \* 4P : Pride(자긍심), Process(효율성), Professionality(전문성), Place(근무환경)
- 업무 적법성에 대한 ‘사전 컨설팅 감사’ 및 잔존 부조리·무사안일에 대한 無관용 등을 통해 적극 행정과 청렴 세관을 실현

## □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성공적 구축

-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對民 포털(MYC\*)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통관 체계 등 세계 최첨단의 지능형 관세행정시스템 구현
  - \* MYC(My Customs) :고객 유형·Needs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업무포털
- 4세대 기반의 정보자원 공동 활용\* 및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업무사각 해소와 다수영역에 걸친 복합위험 대응기반 조성
  - \* 통관·심사·조사·FTA 등 관세행정 영역별 업무자료 및 위험정보 등을 상호 공유·활용
- ‘4세대 국종망 구축 시나리오’에 따라 관련 법·제도 정비, 시범 운영, 대내외 홍보·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인 시스템 전환 추진

## 관세청 소 직원은

- ◇ FTA를 통해 넓어진 경제영토가  
우리 기업들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도록  
FTA 및 AEO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,
- ◇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 
치밀한 세수관리와 과세정상화를 통해  
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,
- ◇ 관세국경에서  
불법·부정 무역 및 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하여  
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 
  
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 
국민 중심·국민 우선의  
World Best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.